

2017년
젠더와
입법 포럼

I



“젠더와 입법 포럼”은 매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입법과제를 공론화 하기 위해 개최되는 포럼이다.

2013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국회와 입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학회, NGO 등과 함께하고 있다.

제1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
	일시	2013년 3월 22일
	주최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제2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컨퍼런스
	일시	2013년 6월 4일
	주최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김춘진 국회의원, 민현주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제3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의 노동과 사회보장 - 법과 정책의 정비방향 한일국제컨퍼런스
	일시	2013년 9월 14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4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난민법 시행에 따른 난민여성과 아동의 인권보장 방안
	일시	2013년 11월 19일
	주최	이자스민 국회의원, 유엔난민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제5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노동문제와 입법·정책의 과제
	일시	2013년 12월 4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6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방안
	일시	2013년 12월 10일
	주최	김현숙 국회의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7차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젠더와 사회보험
	일시	2014년 4월 26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제8차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통일·사회통합과정에서의 젠더법 정책
	일시	2014년 6월 26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제9차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일시	2014년 7월 5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10차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시	2014년 7월 10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제11차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성희롱의 법적 규제와 예방체계
	일시	2014년 12월 20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12차 (2015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
	일시	2015년 4월 29일
	주최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제13차 (2015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
	일시	2015년 7월 24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제14차 (2015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사회보장과 젠더
	일시	2015년 12월 18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제15차 (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일시	2016년 7월 7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제16차 (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한·독·일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실태 및 법과 제도 국제컨퍼런스
	일시	2016년 9월 22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임이자·정춘숙·김삼화
제17차 (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일시	2016년 12월 16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제18차 (2017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 정부 여성·가족 입법과제
	일시	2017년 6월 1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정춘숙·윤종필·신용현·박인숙,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제19차 (2017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 국제컨퍼런스: 스위스, 벨기에,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일시	2017년 11월 9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한정애·임이자·김삼화·이정미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7년 11월 9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 국제컨퍼런스: 스위스, 벨기에,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2017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개최되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을 기념하여, 스위스와 벨기에, 일본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의 성별임금격차 및 법제도적 개선 현황”을 주제로 스위스 성평등 연방 사무국 국장과 벨기에 연방정부 노동시장 분석가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우선, 실비 뒤헤르(Sylvie Durrer) 스위스 성평등 연방 사무국 국장이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스위스의 노력: 실행도구, 정책, 그리고 경험”에 대해 발표하였다. 스위스는 1999년 연방 헌법 제8조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 일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성별 임금 격차는 감소해오고 있다. 특히,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강한 정치의지와 공공 부문에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2016년 9월 ‘동등 임금 현장’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공공 행정 기관, 행정 기관에 준하는 기업, 공적 조달 기관, 공적 보조금 지원 기관 등이 동등 임금을 잘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기적 감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동등 임금 현장에는 2017년 4월 기준, 연방 정부, 12개주, 23개시가 서명하였으며, 그 외에도 스위스는 공적 조달 계약 시 남녀 동등 대우 보장 의무, 동등임금에 대한 대표 기업 조사, 자가 분석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 모델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 도구를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앤 코이넨(Ann Coenen) 벨기에 연방 정부 노동시장 분석가가 “동등임금으로 가는 길: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벨기에의 과제”를 발표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벨기에에서 성별임금격차는 평균 약 7%로, 유럽연합 회원국 평균인 약 16%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경력 경로(career path)에서의 차이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시간제와 풀타임으로 양분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시간제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유로는 여전히 돌봄 책임이 불평등하게 부여되고 있는 점, 노동시장의 성별화, 전공 영역에서의 남녀 차이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벨기에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으며, 최상위 임금 근로자들과 최하위 임금 근로자들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남녀 임금 격차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2012년 「성별임금격차법」에서 임금 구성 단계에서의 논의 강화, 성 중립적 직업 분류 도입, 기업 분석 보고서 및 행동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일본 오차노미즈 대학교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우선, 나가세 노부코(永瀬伸子) 오차노미즈 대학교 교수는 “일본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및 관련 정책들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여러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는 과거 주로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형태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젊은 여성들 가운데 비정규직이 증가하였다. 단, 2009년 단시간 근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2010년 이후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들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2013년 아베 정부의 ‘워머노믹스’ 기간 동안 엄마 근로자들이 상당 부분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며, 고학력 근로자들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의 개선 속도가 특히 느린 점,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에 대해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은 OECD가 통계를 발표한 2000년 이후 매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30%대인 유일한 나라이다. 이는 OECD 국가 비교에서 가장 높은 저임금 비율, 경력단절, 남성 보다 높은 비정규직·15시간 단시간근로, 시간제근로, 중소기업 종사 비율과 여성 집중 직종과 산업에서의 낮은 처우, 돌봄 노동에 낮은 댓가, 경력단절로 인한 기업 내 고위 관리직의 승진 차단 등 복합적인 요인이 농축된 결과이다. 이러한 남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속연수, 교육연수, 노동조합, 직업교육훈련, 산업, 사업체 규모에서 남녀 차이를 좁히는 것이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토론으로는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가 참여하였으며, 앞서 발표한 외국 사례의 시사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해외 발표자들은 실질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동안 한국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는 보다 강력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대표적으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성평등 임금공시제(2018년) 실시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논의하였다.

